ISSN 2384-0994

Welfare
Issue
Today

복지이슈 Today

2017
12.
vol. 57

발행인의 글	3	공공성과 공동체성의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정책을 돌아보다 / 남기철
이슈	4	[이슈 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통해서 본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 평가 / 허선
	5	[이슈 ②]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의 목적 되짚어보기 / 이현주
	6	[이슈 ③] 교육–복지–일자리 복합정책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정책 / 이은정
	7	[이슈 ④]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다 / 김기룡
	8	[이슈 ⑤] 민선 6기, 청년목소리를 과감하게 담아 / 기현주
	9	[이슈 ⑥]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장 성명서 / 정재훈
이슈와 통계	10	예산으로 본 민선 6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김승연
기획 좌담	12	민선 6기, 무엇을 이루었나? / 김진석 · 윤홍식
해외동향	1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안 / 전채경
	15	[핀란드] 2017년 핀란드 연금제도 개혁 / 신영규
	16	[프랑스] 프랑스 2017년 사회보장 재정 결산 / 이은주
	17	[독일]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그 이후 / 권민정
	18	[일본] 일본 '고향세'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 이성한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복지이슈
Today

편집위원회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팀장, 편집위원장)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위원)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안철흥(서울시복지재단 대외협력관 차장)
이수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팀 연구위원)
이창곤(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영준(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집필진
권민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신영규(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성한(일본 복지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이은정(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PM)
이은주(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채경(미국 미주리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성과 공동체성의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정책을 돌아보다

민선 6기의 시간은 무척이나 역동적이었다. 특히 2017년은 그간 익숙해졌던 12월 대선이 아닌 봄의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새 정부의 달라진 국정계획과 복지정책을 조금이나마 지켜볼 시간도 있었다.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간의 차이는 극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들어지는 기획마다 '유사중복' 이니 퍼주기만 하는 포퓰리즘이니 하는 중앙정부의 비난과 훼방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는 서울시의 복지정책 기획 중 상당수를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화하려 하고 있다.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만한 변화다.

하지만 보편적·포용적인 복지국가의 광역정부가 수행해야 할 복지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호에서 민선 6기의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갈 길을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형기초보장제의 진행과 서울시민복지기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보강하고 동주민센터의 정체성을 혁신하고자 했던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50+' 라는 고유명사를 탄생시킨 베이비부머 정책, 발달장애인 정책, 청년지원 정책, 보육지원정책 등 민선 6기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았다. 민선 5기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부임시점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외부 전문가들은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주었으나 동시에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해 주었다. 세부사업에 빠져 원래 지향했던 목표를 상실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저출산을 문제로만 보는 관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기도 했다.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정책은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특히 강조했다. 시민의 복지가 민간, 특히 시장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을 제어하고자 했다. 공공의 역할을 확충하고자 했던 시도는 특히 찾동 사업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입,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등에서 두드러졌다. 공공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중장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성의 강조는 서울시정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관점과, 협치를 강화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 매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시민의 생활이 실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서울시 행정 패러다임 혁신이 지속가능한 변화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당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민선 6기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찾동,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화된 후에는 서울시의 복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선의 공공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의 기획과 조치권,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복지체계가 유연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이 달라지도록 하는 지역복지의 선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두가 숙제이다. 하지만 이런 숙제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도록 한 것 자체가 복지에 대한 열정과 혁신의 시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민선 6기 서울시 복지시정의 성과를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공공성과 공동체성의 화두가 서울의 복지정책에서 향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고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기대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통해서 본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 평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고, 2018년이 1차 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철저하게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3년 'UN 공공행정상' 4관왕의 영예를 안은 적이 있는데, 시민참여촉진분야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후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한 복지기준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지역복지기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합하여 10여 곳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대표사업이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업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이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소득분과의 최저기준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마련되었는데,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당시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29만명으로 추계하였고, 1차 계획이 끝나는 2018년 까지 19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특징은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급자수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형수급자수보다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수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을 볼 때, 서울시 이외의 국민기초수급자수의 증가율에 비해 서울시의 국민기초수급자증가율이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시행과 상관관계가 높다. 서울형기초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적격자임이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형수급자 선정이 국민기초수급자 발굴의 경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수는 목표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매년 평균적으로 5000명 내외의 인원만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연도별 신규수급자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을 필요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기 때문이거나, 사각지대 규모의 과대 추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상했던 규모만큼 수급자수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선정기준의 문제인지, 전달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각지대 과다 추정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표가 산출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서울시 빈곤율과 최저소득보장율의 산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변수의 산출이 가능할 수 있는 서울복지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원래의 목표에 맞게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최저생계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전국기준을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은 그 만큼 서울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산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준의 인상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의 고려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에 대해 보다 시급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같은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도에 세워질 (가칭)서울시민복지기준2.0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원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글 _ 허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목적 되짚어보기

어린 시절, 학교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자주 공놀이를 하였다. 네모반듯하게 공놀이 공간을 그리려고 하지만 물주전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선은 영 다른 곳을 향하고는 했다. 선생님은 그러셨다. 물주전자가 아니라 선의 끝에 눈을 두고 달리라고...

지난 몇 년간 복지현장의 변화가 숨 가쁘게 거듭되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일명 ‘찾동’도 그 중 하나이다. 찾동에 대한 글을 뜬금없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 변화의 끝에 과연 무엇을 상정하고 있나? 찾동의 목적, 목표를 정리하면 이렇다.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발굴주의 우선으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리더 발굴과 주민조직 육성, 마을 공론의 장으로 주민센터 활용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목적·목표들과 관련하여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가 신청 중심에서 비롯되었나? 사각지대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통합·제공하여야 하나? 주민조직은 없었나? 풀뿌리는 육성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문다.

개편 목적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우선 두 가지 정도의 질문, 목표만 고민해보자. 방문 강조의 계기가 된 사각지대 발굴은 정확한 목표인가?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늘 모호하다. 사각지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적격자이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집단,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제도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 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하도록 하는 대응이 가장 전형적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확충, 기준 완화가 전형적 대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달체계에서 왜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목표가 우선되었나? 공적 지원 제도들의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으니 공공이 나서서 적격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두 번째 공공 제도로 대응할 수 없으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여 민간자원으로라도 위기를 넘기게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전달체계는 공적지원제도를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쉬운 제도로 개선하고, 확충하는 정책대응을 지연시키는지도 모른다.

방문의 필요성도 모호하다. 찾동의 방문을 거절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고령의 독거 어르신, 특히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은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그 밖의 집단에 대해서는 방문 목적이 모호하다. 방문에서 위기 감지를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공적 지원 대상에 대한 일상적 사례관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의 대상은 민간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하여야 한다. 필요이상의 방문과 여기에서 비롯된 인적·물적 자원의 남용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복지에 대한 이해와 주도적인 모색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지원의 제공과 확충에서 사회구성원의 역량은 중요한 기반이 된다.

찾동은 공공이 하여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의 역할을 합리화·정교화해야 한다. 욕구에 대한 종합분석, 공공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전문적 판단을 활용하는 행정기반 마련, 그리고 이 행정이 정책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제도 갖춰야 한다. 오히려 공공과 주민의 협력은 복지정치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공공이 추동하는 주민조직화, 마을육성은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주민 조직 육성인지 주민 동원인지 주의하여야 하고 지역단위로 구성된 유사 주민조직들의 중첩에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민조직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본연의 과정이 있다. 자생적·자율적이어야 한다.

민간복지기관에도 소망하는 바 있다. 자율성을 공공에 주장하기보다 민간 자원으로 독자적 서비스를 개발, 공공 서비스 개발에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쟁에 치진 청소년, 정서가 불안한 이웃, 노인의 돌봄 부담과 고독 등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영역이 적지 않다.

글 _ 이현주

교육-복지-일자리 복합정책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정책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퇴직에 직면하면서 인생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베이비부머의 중년기는 고령화로 인해 길어졌는데 막막함과 불안감은 팽배해 있는 현실이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 변화 및 세대 특성을 파악하고 베이비부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주요 정책이 교육-복지-일자리 복합정책 모델로서 서울시50플러스(이하 50+)정책이다.

서울시50+정책의 주요 대상은 50~64세 인구집단이다. 베이비부머는 한시적 코호트이므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될 인생주기로서 50~64세 인구집단을 50+세대로 명명하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50+정책은 서울시 전체인구의 21.7%에 해당하는 현재 50+세대를 위한 정책임과 동시에 이후 세대에게도 새로운 인생모델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서울시50+정책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그 전략과 방법을 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가 있었다. 먼저, 서울시는 복지본부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2015년 1월). 50+세대의 문제와 이슈에 집중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그리고 50+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이자 실행의 전담기관으로서 서울시50+재단을 출범시켰다(2016년 5월). 또한 50+세대를 위한 교육-일자리-복지의 복합 플랫폼으로서 권역별50+캠퍼스와 자치구50+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현재 캠퍼스 2개소와 자치구센터 4개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2020년까지 캠퍼스 6개소, 센터 19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다.

이처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시50+지원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2016년 5월), 서울시50+정책이 본격화되었다. 50+세대들이 탐색과 배움을 통해 인생후반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경험과 배움의 결과들이 실제 사회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50+세대 적합 앙코르커리어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50+세대를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기여하는 주체로서 위치 지우는 '당사자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서울시50+정책의 초기 성과라고 한다면, 50+세대를 둘러싼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다른 지자체들에서 50+세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 중앙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서울시50+정책의 내용이 반영되어(5060 신중년 정책) 전국적으로 확산화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50+정책이 OECD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18년 초 발간될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집에 소개될 예정이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서울시50+정책이 풀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2016-2017년에는 50+인프라를 구축하고 50+의제 및 파트너 발굴, 다양한 파일럿 사업 운영을 추진하였다면, 2018년부터는 제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많은 과제들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과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일 것이다. 교육-복지-일자리 복합정책 모델로서 50+정책은 50+재단·캠퍼스·센터라는 기관 안에서 완결되기는 어렵다. 사회적 경제, 마을, 청년, 자원봉사,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사회 50+당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서울시와 50+재단이 50+정책 추진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 _ 이은정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체장애 등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고, 필요할 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스스로 요구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 복지 서비스 미수급률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같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좌시하지 않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들만의 복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둘 제안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거점병원 등과 같은 새로운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등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시책만으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선 6기 들어 서울시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하여 복지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는데, 발달장애인 문제 역시 이 같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와 같이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의 발달장애인 시책보다 한 발 앞선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해 2월에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관련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정책 개발 TF,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 등 다양한 민관협의 기구를 설치·운영해 왔고, 그간의 연구 및 논의의 성과를 이 계획에 모두 담았다.

서울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일자리, 주거공간, 복지서비스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조성·운영 등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이면서도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사업들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시는 이것을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연구용역,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시범 사업,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이 조금씩 그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글 _ 김기룡

민선 6기, 청년목소리를 과감하게 담아

서울시의 2030 청년인구는 311만여명, 서울시 전체 인구의 31% 규모다. 또한 전국 청년인구(1431만명)의 21%가 서울에 살고 있다[1].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연령대 인구보다 훨씬 많은 청년 인구가 밀집해 있다. 청년인구가 많아서, 청년 당사자를 대변하는 청년집단(단체나 조직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서울시 행정과 의회의 노력으로 서울시 민선 6기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민선 5기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일자리 정책협약,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청년일자리허브 설치 등 청년 일자리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선 6기 청년정책으로 대표되는 〈2020 서울시 청년보장〉은 '청년문제=일자리 문제'라는 기존 명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다. 청년의 사회 참여, 주거, 교육, 소득보장 등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노력한 '청년종합 지원정책'이다.

2014년 11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정책 시민참여기구)는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1년여의 준비 끝에 2015년 1월, 청년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정책의 대상을 기존 미취업 청년에서 15~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일반화하고, 정책의 범위를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익보호까지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기관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였다. 전국 최초의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벗어난 종합정책으로 발돋움할 근간이 만들어졌다. 2016년부터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서울혁신기획관 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두고, 본격적인 종합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청년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한 청년 당사자는 무려 963명에 달한다. 이들이 523회의 회의, 60개의 분과 운영 등을 통해 매년 10~12개의 청년정책 의제를 제안했고, 이 중 많은 부분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행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바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 즉 청년기의 이행과정(진로이행, 가족이행, 주거이행)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청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소득보장 정책이다. 이처럼 민선 6기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당장 5년 후의 자기 모습도 그려볼 수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의 청년정책 총 예산이 350억원이었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플랜〉 수립 이후 2016년 891억원에서 2017년 1805억원으로 매년 2배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청년정책이 단순 공공일자리 지원 정도에서 청년수당 등 소득보장, 청년뉴딜일자리, 청년1인가구 공공주택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지원,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등 주거, 소득보장 영역의 신규 정책이 보다 확충되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당장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필요와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사회적 상식 사이에서 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지금 청년정책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서울시 민선 6기의 청년정책 방향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청년지원정책,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정책이 이후 청년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글 _ 기현주

1)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20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장 성명서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랜 기간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연속 15년째이다. 세계 최장 초저출산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한국에서 서울은 더 앞서 가고(?) 있다. 1998년 합계출산율이 1.26으로 내려간 이후 2000년에 다시 1.26을 기록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늘 1.0 전후를 보였다. 2016년 출산율도 0.94이다. 18년 연속 초저출산 현상이다.

워낙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많아서 심각함을 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서울시장이라면 전할 수 메시지를 상상해 보았다. 이하는 서울시장이 발표한 가상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성명서'이다.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201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담당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 1.0 내외 초저출산율은 이전 시장들 임기 때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어도 서울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밝힌 대로 '출산하면 수당 주는 얄팍한 정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0~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주게 되지만, 서울시민 여러분이 아동수당 받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아동 양육·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하고 보육반장, 보육지원센터를 늘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친환경의무급식을 확대하며 동네마다 안전한 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여 더 이상 서울 거주 젊은이들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서울시민 여러분께 새롭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취업 지원을 확대하면 초저출산 현상에 제동을 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은 초저출산 현상 해결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함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찾동사업, 보육반장, 마을 만들기 등 이전 시장들과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살펴 주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울시를 만들면 몇몇 현금수당 도입하는 것보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토대를 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 낳는 주체로서 여성이라는 개념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평등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되기 위한 비전 제시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 여건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는 관심이 약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홍보하는 자리에는 기꺼이 얼굴을 내밀었지만, 여성의 '독박육아'가 얼마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인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도 버리겠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적게 낳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겠습니다. 낳고 안 낳고는 여성의 선택인데, 그것을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다만 성평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노력만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독박육아가 점점 사라지는 마을·동네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때 결정하셔도 출산은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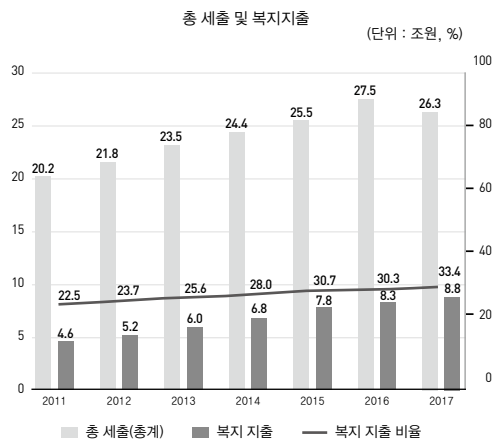
- 서울시장 드림 -

글 _ 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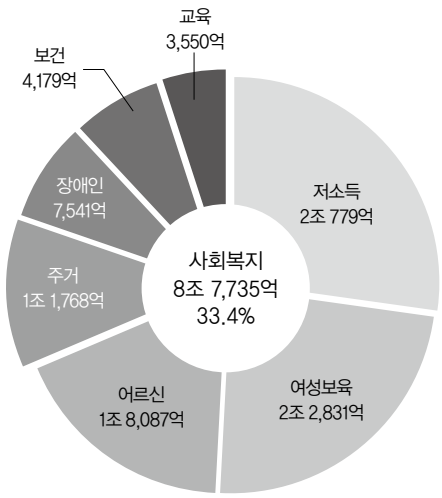
예산으로 본 민선 6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의 특징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이다. 2011년 4조 5000억원이었던 사회복지 예산이 2017년 8조 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22.5%에서 2015년 30%를 넘기고, 2017년 33.4%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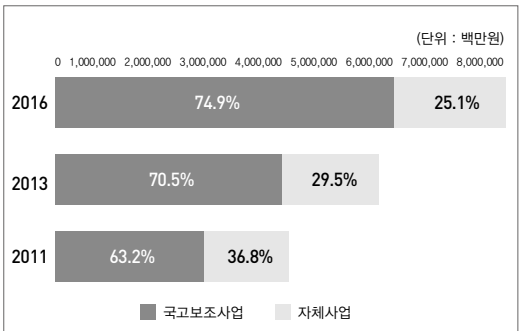


[그림1] 서울시 총세출 및 사회복지예산 현황



[그림2] 2017년 분야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2016년 사회복지예산 8조 3000억원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국비+시비)이 6조 2000억원으로 75%나 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전국 평균 보조율이 75%인데 비해 서울시는 54%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서울시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가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견인했지만, 한편 서울시 자체 사업을 제약하는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 국고보조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 예산 비율

민선 6기 주요 정책의 예산 특징

이런 예산 상황에서도 민선 6기 동안 서울시만의 선도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청년수당부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화가 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서울시만의 혁신적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민선 6기 대표사업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50+사업, 청년정책, 서울형기초보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1~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은 민선 6기 60대 정책공약 사업으로 2014년 어르신복지과에

베이비부머정책팀으로 신설되었다가 2015년 인생이모작지원과로 확장·신설되었다. 당시 726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2017년 1136억원으로 늘어나 3년 간 총 2,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베이비부머 사업은 50+재단 설립 및 캠퍼스 확충 등 신규 시설 설립으로 인해 초기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신규시설 투자가 끝난 이후에는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서울의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서울시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 지난 4년 간 4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서울형기초수급자 수는 2014년 3972명, 2015명 3636명, 2016년 2784명 정도로 실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에 비해 지원 예산이 매우 부족한 편이지만, 서울형기초보장사업을 통해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사업은 기존에 경제진흥실에서 담당하다가 2016년부터 일자리정책관으로 이관되면서, 예산도 2014년 102억원에서 2016년 31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2015년까지는 협동조합지원과 마을기업지원 등에 집중하였다가 2016년부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지역단위 생태계 조성과 공정무역도시 서울 및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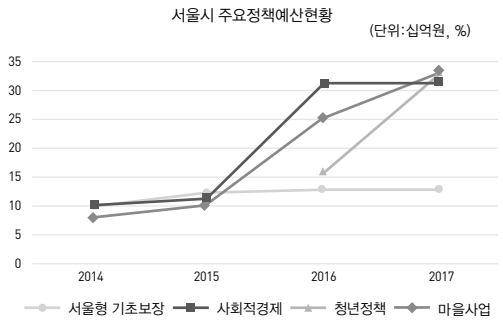
마을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민선 6기 이후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0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16년 254억원, 2017년 329억원으로 늘어나 4년 간 7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6년부터 찾동사업과 지역협치 활성화사업,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이 신규로 편입되면서 일 년 사이에 예산이 2.5배나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은 2015년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간 7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4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당초 계획의 7%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3년 간 6600억원까지 상당한 예산증가가 예상된다.

〈표 1〉 민선 6기 주요 정책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서	주요 정책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증감율
복지본부	베이비부머를 위한 50+사업	–	72,609	94,067	113,692	280,368	25.1
	서울형 기초보장	9,832	11,810	12,568	12,542	46,752	8.5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	10,234	11,409	31,133	30,986	83,762	44.7
혁신기획관	마을사업	8,033	10,111	25,414	32,905	76,463	60.0
	청년정책	–	–	15,986	33,947	49,933	112.4



[그림 4] 민선 6기 주요 정책의 예산 변화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복지 등 선도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왔으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제약과 재정건전성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복지 재정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예산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서울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투자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 _ 김승연

민선 6기, 무엇을 이루었나?

복지이슈Today는 2014년 6월에 출범한 서울시 민선 6기의 끝자락에 기획좌담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좌담에는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하여, 민선 6기의 복지정책 성과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민선 6기 복지정책을 통한 시민의 삶 변화

윤홍식 :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하시고 나서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시정과 비교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직면한 현상적 문제가 있으면, 시정의 대응방식은 그 문제들에 대해 개별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서울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무엇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진석 : '긴급복지' 방식으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확장해준 것은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투자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한 게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특히 중앙정부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을 내걸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한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관리가 잘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윤 : 서울시가 독자적인 기준선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시민복지기준선이 작동된 이후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기준선은 아니더라도 최저수준은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부평가를 보면 목표달성 100%라고 한 것들이 많아요. 분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선 6기 복지정책의 종합 평가

김 : "찾동"이나 사회서비스공단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찾동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인 사람을 같이 지원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사실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밀어붙였기에 지금에 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의 혼란이 상당했거든요. 찾동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그때부터는 페이스 조절을 하고 서울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공단은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된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문제제기를 선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들을 해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윤 :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적 보육시설을 아동 수의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역대정부에서 실현하지는 못했죠. 어쨌든 서울시가 공적 보육시설 확대를 이뤄냈고, 한국에서도 민간 지배적인 인프라를 시 정부가 노력해서 공적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잖아요. 민간 인프라를 공적 인프라로 전환하는 연장선상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공단은 국내 노동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이거든요. 전

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20%까지 늘어난다면, 나머지 노동시장의 저임금 일자리는 버틸 수 없거든요. 이런 정책을 설계하면서 그 정책이 지방정부차원을 넘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시범사업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와 추진 철학,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입니다.

김 : 청년은 전통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프레임에서 청년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만들기만 하면 되었어요.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 문제는 단순히 노동정책 차원뿐 아니라 인구문제 측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종합 계획을 세우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어요. 청년수당, 주거지원 외에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윤 : 50플러스, 여성, 청년 등 대상별로 자꾸 정책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에서 서울시가 뭘 할 수 있는지, 즉 공공부문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인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보완적 수단으로 창업, 주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생활보장 대책을 수립하면 그 속에 청년, 여성 등의 집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포괄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기본을 놓치고 대상으로 접근하니까 정책이 협소해지는 거죠.

김 : "마을 만들기"도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아직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지만, 마을에서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 : 양질전화라고, 물이 끓을 때 0도부터 99도까지는 다 물이잖아요. 1도가 없어져서 기체가 되는데,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쩌면 비등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고, 비등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거죠. 민선 6기 복지정책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양질전화의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 6기를 넘어

김 : 보궐선거 이후 민선 6기까지 오면서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험의 성격이 짙은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실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 : 민선 6기의 정책성과가 정치적 성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정과 서울시장의 정치철학에 동의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서울시의 구체적인 정치 자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조직된 주체로 남는다든지, 마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는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남겨지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개혁이 필요한 일,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조적인 접근 속에서 프로그램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예상대로 미국 사회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의료보험(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과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DACA) 폐지, 이슬람권 국가출신 입국 금지 행정명령, 이민개혁법안 등 미국 사회 취약계층에 가해진 연이은 타격이 정치적으로 큰 관심과 저항을 동시에 이끌었다. 그중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 스탬프 예산삭감안은 미국 사회복지정책 근간을 흔드는 변화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 속하지만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미국 내에서 식량 불안 문제를 겪는 인구가 약 12.7%(2015년 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 복지담론에서 다소 낯선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문제가 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식량불안정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s)라고 불리는 식품배급표를 지원하는 추가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이하 SNAP)이 있다.

SNAP 프로그램은 1960년대 말, 닉슨 행정부 시절 극심한 기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자 기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탄생한 제도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보기 드문 정책이다. 2000년대 후반 미국 경기침체기에 빈곤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경제문제를 겪은 중산층을 도운 효자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겐 가구 수 및 가구 전체 소득에 따라 식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배급표 형태로 지급된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SNAP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의 식량불안정 문제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거시경제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기능한다고 드러났다.

이러한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약 1900억 달러 (한화 약 200조원)가량 삭감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주 정부들은 SNAP 프로그램 예산의 약 8%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약 25%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예산삭감안은 단순히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주 정부 부담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연방정부 빈곤선 130%라는 소득기준은 넘지만 필수 지출금액이 많아서 충분한 식품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 부여되던 자격이 중단된다. 또한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6인분의 배급표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더욱 강화된 근로의무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의무강화는 장애가 없는 비노년층 인구에게 모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AP 프로그램 수혜자의 대부분은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이다. 트럼프에 반대하여 SNAP 프로그램의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경기침체 시 이만큼 효과적인 재정안정화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며 SNAP 신청자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목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지원, 정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 연방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사회의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러한 복지후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정부는 SNAP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뉴욕 시는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푸드 스탬프 앱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 외의 다수 지방정부에서 먼저 복지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카드 지급방식을 시도하여 성공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현금카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글 _ 전채경

관련자료

Schanzenbach, Diane W., Rector, Robert E., & Gebelhoff, Robert. (2017.06.16.). "Are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posed food stamp cuts justified?"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should-federal-funding-for-food-stamps-be-cut/2017/06/16/29f7bc44-5202-11e7-b064-828ba60fbb98_story.html?utm_term=.be6a78283d65

Stewart, Nikita. (2017.07.24). "Applying for Food Stamps in New York? There's an App for That."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7/07/24/nyregion/food-stamps-hra-app.html

Whoriskey, Peter. (2017.08.17). "Hunger receded after the recession but not for older Americans, U.S. figure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8/17/hunger-abated-after-the-recession-but-not-for-the-elderly-u-s-figures-show/?utm_term=.6931e3f5c032

2017년 핀란드 연금제도 개혁

핀란드의 연금은 소득연동연금(earnings-related pension)과 국가연금(national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연동연금은 노동기간과 연금기여분에 비례하여 그 급여액이 결정되는 연금이고, 국가연금은 은퇴연령 전 노동기록이 없거나, 소득연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소득연동연금은 고용자,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연금기여금을 재원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복수의 연금관리기관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와 같이 소득연동연금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중앙정부로 구성된 3자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그 내용이 결정된다. 핀란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연금제도 개혁은 3자 협의체에서 2002년에 가결되어 200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혁안이었다. 이 개혁의 목적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퇴직연금의 급여액을 축소하고, 최소은퇴연령을 63세로 높임으로써 평균 은퇴연령을 2~3세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이 개혁안에 따른 연도별 계획들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올해부터 핀란드에서는 새로운 연금 개혁안이 실행되고 있다. 2014년 9월, 점차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기존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하려는 목적에서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9월에 3자 협의체는 최종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승인 과정에서 개혁안의 연금수령액 계산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전문직과 관리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인 Akava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른 노동조합연맹들과 고용자단체가 모두 동의하면서 개혁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만 63세였던 은퇴연령을 2027년에는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즉, 1955년생의 은퇴연령을 63세 3개월로 조정하고, 출생연도가 1년씩 늦어질수록 은퇴연령을 3개월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1962년생부터는 은퇴연령이 65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위 조정과 관계없이 63세의 은퇴연령을 적용한다.

둘째, 피고용인의 연금 가입 최소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2017년부터 연금수령액 계산식의 연금적립률(accrual rate)을 1.5%로 정하였다. 다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53세에서 62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7%의 연금적립률을 적용한다. 즉, 2016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계산식을 바탕으로 연금수령액을 산출하고 2017년부터는 새로운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은퇴 후 받을 연금수령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액 = 총 노동기간의 연간 평균임금 × 노동기간(年) × 1.5%

셋째, 은퇴연령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룰 경우, 연금수령액은 1개월마다 0.4%씩 1년에 총 4.8% 증액되도록 결정했다. 반면,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 만 61세부터는 연금수령액의 25% 또는 50%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은퇴 전 수령액에서는 1개월마다 0.4%씩 감액하도록 했다.

넷째,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금기여금을 피고용자 임금의 24.4%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만 53세 미만 또는 63세 초과의 피고용자는 임금의 6.15%, 만 53세 이상 63세 이하는 7.65%를 기여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평균 피고용자 임금의 1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 _ 신영규

관련자료

핀란드 연금센터 홈페이지 http://www.etk.fi/en

프랑스 2017년 사회보장 재정 결산

프랑스는 2010년 사회보장재정에서 240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문제 해결을 정부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매해 사회보장재정 결산에 매우 민감하다. 2016년도 총 사회복지 재정은 약 8000억 유로이며 이 중 주요 4대 사회보장(건강보험, 노령연금, 산재보험, 가족수당) 재정은 4745억 유로로 전체 GDP(2조 1811억 유로)의 1/5정도였다. 지난 10월에 보고한 2017년도 재정결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4대 사회보장의 예산은 총 3924억 유로로 건강보험 2032억 유로(52%), 노령연금 1265억 유로(32%), 가족수당 499억 유로(13%) 산업재해보험 128억 유로(3%) 인데, 10월까지의 지출이 이미 예산을 초과한 3929유로에 달한 상태이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 2059억 유로(52%), 노령연금 1250억 유로(32%), 가족수당 499억 유로(13%), 산재 121억 유로(3%) 등이다. 남은 2개월간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2016년에는 적자 40억 유로로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으며 2017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44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는 사회보장 재정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문제를 위해 마크롱 정부는 사회보장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결산 보고와 함께 내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2018년도의 사회보장 적자를 22억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수당은 이미 2015년 올랑드 정부 당시 자녀수만 충족되면 지급되었던 것을 부모의 수입을 수당액 측정기준에 포함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현 정부가 예전 정책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안을 계획하여 취약계층 특히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수당을 2018년 10월 이후 30% 높이는 반면 수당지급 기준 소득을 조절하여 수입이 높은 가정의 가족수당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사회기여금(CSG) 조정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월급에 가하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상여금이나 특별수당 등에 세금을 부과 하는 방안과 노령연금에 부과했던 세금을 감면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담배값 인상으로 현재 7유로하는 담배 값을 2020년까지 10유로(1만 3000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넷째, 병원지출을 절약하는 방안인데 특히 마크롱 정부는 적자가 큰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병원재정 감축에 고심하고 있다. 경비 절약을 위한 병원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14억 6천만 유로로 발표한 이후 프랑스 병원협회에서는 병원재정의 문제는 병원지출만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일반 개업의사들의 진료수가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재정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의무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내년도 초등학생의 의무적 예방접종을 현재 3종류에서 11개 종류로 확대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00년부터 매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조사결과[1)]에는 응답자의 62%가 취약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연대 활성화 수당(RSA)을 더 올려야 하며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이 수당을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85%가 찬성하여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 혼자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의 보호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에 61%가 찬성하여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재정은 전체 사회보장재정의 10% 정도이며 이는 전체 GDP의 3.2%에 해당된다.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정부 역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 _ 이은주

관련자료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securite-sociale-2017

http://www.gouvernement.fr/argumentaire/en-2017-le-deficit-de-la-securite-sociale-sera-resorbe

http://www.lefigaro.fr/flash-eco/2017/09/27/97002-20170927FILWWW00291-securite-sociale-deficit-de-44-mds-d-euros-en-2017.php

http://www.lemonde.fr/financement-de-la-sante/article/2017/09/27/le-deficit-de-la-securite-sociale-moins-important-que-prevu_5192540_1655421.html

'laide et l'action sociales en france' edition 2017. DREES. 2017 5월

1) 2017년 5월에 발간된 '2017년 취약계층 대상 사회지원활동' 에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그 이후

독일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제(Mindestlohn)를 처음 도입했다. 그 전까지는 '고용자-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의해 몇몇 분야에서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연방통계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5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난 4개월 후를 기준으로 190만명의 노동자가 시간당 8.50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여전히 100만개나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장기실업자, 18세 미만의 청소년, 집배원 혹은 특정 임금 협약을 맺은 고용자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지지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정당성'을 제시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에도 불구하고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이주노동자로 인한 임금덤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아주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빈곤을 없앨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부모 가족이나 저임금 가족의 경우 최저임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도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저임금노동에 의해 유지되던 산업이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외국으로 옮겨가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관료기구가 생겨나거나, 노사 간 임금자치주의 전통이 훼손됨에 따른 노동조합의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통계청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이제까지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전에는 인구의 15.7%가 빈곤의 위험에 처했었다면 2016년 기준 15.7%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른 임금배분 불평등 또한 변화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2로 자신의 임금을 보충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독일 시사주간지 ZEIT의 보고에 의하면 2014년에 118만 명에서 2015년 113만 명으로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

비록 최저임금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명확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노동시장-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요하킴 묄러 소장은 최저임금이 적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최저임금이 불충분하게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최저임금 통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전과 같이 도입 후에도 예외가 되어온 직업군이 있다. 집배원은 최소한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계에는 20015년 10월부터 시간당 8.60유로로, 미용사들은 같은 해 8월부터 8.50유로로, 섬유업계에서는 같은 해 4월까지 7.50유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정원사와 농업분야에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짜리 이행규칙이 시행되는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적용되게 된다.

최저임금제는 처음 도입할 때 2년마다 임금을 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8.84유로로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되었다. 또한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직종에도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다음 임금조정은 2019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글 _ 권민정

관련자료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6/06/PD16_227_622.html;jsessionid=BBAE84448CDA3FB6F1F2426704D70767.InternetLive1

https://www.lohn-info.de/mindestlohn_gesetzlich.html#dokumentation

http://www.zeit.de/wirtschaft/2016-10/mindestlohn-wirkung-statistisches-bundesamt

일본 '고향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올해 10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아베정권은 또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년에 일본에서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연금, 육아, 고용 등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과제들을 하나씩 실현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중에서도 증세는 빼놓을 수 없는 현안 중 하나였다. 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늘어나는 욕구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는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마쓰다 히로야(增田寬也) 교수는 일본의 89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인구와 생산인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기초로 인구변화를 예측했고 그 결과 일본의 90%의 이상의 지방도시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한동안 일본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에 일본정부는 무조건적인 증세보다 다른 방식의 납세제도를 채택하여 대응하고 있다. 바로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이하 고향세)이다. 2008년부터 실시된 고향세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세금을 기부형식으로 지불하면 특산물과 각종 공제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도시와 납세자가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공제액을 2배로 늘리고 납세의 확정 신고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논스톱 특례제도'를 2015년 새롭게 도입하면서 고향세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고향세의 재정비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의 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 한 명이 최대 5개의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을 선택하여 세금을 내면 해당지역의 특산물과 다음해의 주민세를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이며 기부액에서 2000엔이 넘는 부분은 소득세나 주민세의 형태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이다. 또한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로 보내는데, 특산품은 쌀, 채소, 과일, 해산물, 술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해당지역의 국립공원이나 유원지의 입장권, 호텔이나 온천 등의 무료 숙박권도 제공되고 있다.

고향세가 단지 지자체의 재정확보에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보낼 지자체의 특산물을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지역고용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1]에 따르면 고향세는 2016년 한 해에 총 2844억엔이 납부되었으며 1652억엔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1.7배 늘어났다. 또 고향세를 가장 많이 기부 받은 지역을 보면 1위가 미야가키현(宮崎県都城市) 73억 3316만엔, 2위 나가노현 이나시(長野県伊那市) 72억 469만엔, 3위 시즈오카현 야이즈시(静岡県焼津市) 51억 2128만엔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가 특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지역의 특산품인 소고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향세 활성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자체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고가의 답례품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고향세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답례품가격을 기부액의 30%이하로 하는 방식을 권고한 상태이다.

또한 고향세로 거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문제(육아, 환경 등)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방식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 _ 이성한

1) 총무성 관련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부서(연구개발팀, 02-6353-0270, today@welfare.seoul.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041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Tel. 02)6353-0270 Fax. 02)6353-0221